



우리는 왜 G20에 반대하는가

G20의 실체 15문 15답



발간사

우리는 왜 G20에 반대하는가?

4

G20 정상회의의 역사와 전망

1. G20은 언제, 왜 탄생했나요?

8

2. 개도국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2

3. G20은 무엇을 위한 모임이고 전망은 어떠한가요?

16

경제위기와 G20

4. G20의 경제위기 원인 진단은 타당한가요?

19

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20이 합의한 것은 무엇인가요?

23

6. 경제위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6

G20과 우리의 삶

- 30 7. G20이 합의한 금융개혁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인가요?
- 33 8. G20의 글로벌 협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36 9. G20이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데 실제로 그러할까요?
- 39 10. G20이 빈곤국 발전을 돕는다는 데 정말인가요?
- 43 11. 이명박 정부가 G20을 통해서 노리는 바는 무엇인가요?
- 47 12. G20과 APEC, FTA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G20과 우리의 대안

- 51 13. G20 투쟁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55 14.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 59 15. 우리는 어떻게 투쟁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G20에 반대하는가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패권과 기존 경제 구조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G20을 규탄하는 운동 역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G20 투쟁 조직화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습니다. 또한 G20은 패권적인 기존의 국제회의와 다르기 때문에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중 운동보다는 ‘비판적 개입’을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G20의 실체, 15문 15답>은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을 덜고 투쟁을 잘 조직하기 위해서 1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소책자가 교육의 자료로 이용되고 G20 투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책자 전반을 아우르는 질문은 “G20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G20은 규탄과 투쟁의 대상이고,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입니다. G20에는 대표성, 정당성,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경제규모를 중심으로 선택된 20개국이 전 세계 190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의 교리를 강요해서 현재의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정당성이 없고, 회의 참가가 봉쇄되어 있고 내용과 진행절차도 철저히 비공개라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질문 1, 질문 3).

선진국의 모임인 G8과 마찬가지로 G20에는 아무런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왜 20개국인지에 관한 기준도 없습니다. 누가 20개국에 세계

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나요? 경제규모가 참가 여부와 발언력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G20은 기업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와 구성 원리와 같습니다.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남반구 국가와 민중의 입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대안세계화운동가 월든 벨로는 “누가 그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했나?”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G20 반대 투쟁의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개도국이 G20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협소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거부하고 세계 민중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세계적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주의의 원칙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질문 2).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책을 잘 조율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G20이 목표로 하는 것은 현 체제의 원만한 관리와 패권유지입니다(질문 5).

G20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사르코지와 같은 정상이나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들마저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의 위기가 훨씬 더 깊고 넓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제와 단절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큼니다(질문 4, 6).

G20이 추진하는 금융개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반성에 근거를 둔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 없이

는 하나의 정책도 온전히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되는 요구는 스스로의 목표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대중운동의 구성으로 사회변화를 꾀했던 대안세계화운동의 구상과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융통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그 자체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쟁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 본질을 폭로하고 대안세계를 향한 운동의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인 금융통제의 요구를 대안세계화운동의 맥락 내에서 파악해야 합니다(질문 7).

G20은 행동이 아니라 말로 수많은 문제를 감추고 자신을 멋지게 포장합니다. G20은 경제 외에도 고용, 발전,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받는 국제회의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국 정상들은 자신들의 친목과 단합을 뽐내고, 언론을 상대로 멋진 말을 늘어놓고 좋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약속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G20도 마찬가지입니다. G20은 노동권, 환경, 발전에 관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잘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에 힘을 쓰겠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겠다,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노동권을 존중하겠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거리가 멉니다.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각국에서는 이런 말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질문 8, 9, 10).

한편 이명박 정부는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집중 단속하고 <G20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봉쇄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하반기의 시작을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로 장식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민권마저 박탈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질문 11).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다층적인 사회적 위기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이러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고,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상을 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가 G20 정상회의 바로 다음 날에 일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권 유지를 위해서 동아시아를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질문 12).

우리는 보다 정의롭고 대안적인 세계를 위한 꿈을 꾸고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항하는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반세계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G20에 반대하는 투쟁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G20 투쟁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운동의 건설과 다양한 운동 간의 연대와 국제적인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추진할 힘을 키워야 합니다(질문 13, 14, 15).

이 책자가 투쟁의 의지를 더욱 북돋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중의 대안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사회진보연대 G20 대응팀

G20 정상회의의 역사와 전망

1. G20은 언제, 왜 탄생했나요?

G20의 탄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변화 속에서 역사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한동안 파괴되었던 세계경제를 복구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은 달러를 금과 교환해줄겠다고 약속하면서 달러를 세계화폐로 등극시켰습니다.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는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950-60년대에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가 호황을 맞이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조종사 G7

하지만 호황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기 사이에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한편, 세계화폐로서 달러의 지위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1974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모여 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G5라고 불리는 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G는 그룹(group)의 머리글자로 G5는 5개국 회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임이 세계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포함되어 1976년에 G7 정상회의로 확대 됩니다.



G7과 IMF

- ▲ 1987년 6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G7 회의. G7 회의는 IMF와 세계은행 총회 직전에 열려서 주요 의제를 결정했다.
- ▼ "IMF와 세계은행 = 수백 명의 부자와 수십억 명의 빈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제3세계 각지로 퍼뜨리는 데 혁혁한 공을 올린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비꼬고 있다.



G5에서 G20까지

- 1974** 오일쇼크 이후 미국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에게 제안, G5 결성
- 1976** 이탈리아, 캐나다 참여, G7으로 확대
- 1997** 러시아 참여, G8으로 확대, 경제분야는 G7 유지
- 1999**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G20 재무장관 회의 출범
- 2008** 최초의 G20 정상회의 개최(11월, 미국 워싱턴)
- 2009** G20 2차 정상회의(4월, 영국 런던)
G20 3차 정상회의(9월, 미국 피츠버그)
- 2010** G20 4차 정상회의(6월, 캐나다 토론토)
G20 5차 정상회의(11월, 한국 서울)

G7은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비밀리에 결정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1980년대부터 G7은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로 퍼트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이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 유명한데, G7이 바로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7개 국가의 소수 고위관료가 모여서 비밀리에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 G7에서 사전에 결정되었습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G20의 탄생

한편 1980년대 이후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도국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개도국 경제가 성장하고 잘 운영될 때에는 선진국의 이익과도 크게 상충되지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개도국은 단순히 새로운 산업생산지가 아니

라 새로운 금융자본의 투자지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개도국 대신에 신흥시장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 데, 주식시장·외환시장과 같이 금융적인 측면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동아시아와 러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에서 큰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세계경제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1997-98년 한국의 IMF 경제위기도 그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금융위기에 선진국의 자본이 깊숙이 개입해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개도국이 참여하는 2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2년 간의 회원국 조정 끝에 1999년에 최종적으로 G2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정상회의로 격상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진행되던 G20은 2008년에 정상회의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그 까닭은 2008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입니다. 2007년부터 감지되기 시작한 미국의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9월 미국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숨겨져 있던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경제는 일시에 대혼란에 빠졌고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제안하여 세계경제 문제를 시급하게 의논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에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2. 개도국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왜 미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G7이나 G8(G7+러시아) 정상회의를 활용하지 않고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G20 정상회의를 소집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선진국 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도국으로의 위기 비용 분담

먼저, 1980년대 이후로 개도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2000년대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1980년, 1996년, 2006년 구매력평가GDP(물가수준을 감안한 GDP)를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G7은 54%, 46%, 40%로 감소한 반면 G7을 제외한 G20의 비중은 21%, 30%, 36%로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경제가 순조롭게 운영될 때에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기에 따른 비용이 엄청난데, 이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기의 비용을 떠넘기기 위해서 개도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중적자를 지탱해주는 개도국

두 번째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개도국의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이중적자를 메우는 특수한 돈의 흐름을 일컫습니다. 미국경제는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해서 생기는 무역수지 적자와 세금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재정수지 적자가 겹치는 이중적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자가 쌓인다는 것은 빚이 늘어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중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아시아와 산유국들이 상품과 원유를 수출해서 외환보유고로 비축해놓은 달러를 다시 미국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갔지만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달러환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순환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지자 달러환류가 계속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환류가 당장 중단된다면 세계경제는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달러환류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세계경제 구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은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환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도국의 참여가 꼭 필요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리와 포섭

마지막으로 중국이 문제입니다. 1990년대 이후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는 GDP 규모로 볼 때 2030년이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고 미국 국채의 최대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을 국제 외교무대에서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매년 G2라고도 불리는 '경제전략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다자틀을 통해서 국제외교 무대에서 중국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포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20 정상회의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미국의 패권을 관철·유지하는 구성

한편 지정학적으로 보면 G20의 구성에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G20에는 개도국과 각 지역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태평양-아시아 지역과 남미 국가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친미 국가들이어서 미국에 매우 유리한 구도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G7에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지역대표 2개국(멕시코, 남아공)을 포함시킨 G1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사회운동의 일부에서는 대표성이 없는 소수가 모여서 세계경제를 결정한다는 점이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G20 대신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하고자 주장합니다.

따라서 G20에 개도국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G20을 통해서 기존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와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진행과정조차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지는 폐쇄적인 회의를 통해 소수 국가의 지배자들이 세계경제와 정치 질서를 좌우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G20에 개도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기존의 G7과 같은 패권기구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 G20은 무엇을 위한 모임이며 전망은 어떠한가요?

세계경제에 관한 최상위 포럼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 9월에 열린 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G20을 세계경제에 관한 최상위 포럼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를 안정화시킬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20은 이 문제에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였습니다.

토론토의 실망스러운 결과

하지만 G20 정상회의가 앞으로 안정적인 기구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6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4차 정상회의의 결과가 매우 초라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실효성 있는 합의를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열린 회의였습니다. 유럽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재정긴축을 주문했지만, 미국은 자국 경제의 위축을 우려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감축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각국이 알아서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은행세 문제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은행세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구제금융으로 금융기관이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은행세는 세계 사회운동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금융거래세와 달리 금융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2009년 12월,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등에 반대하는 그리스 노동자들의 파업

일부 걷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20은 이마저도 합의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은행제와 관련된 규제는 각국이 알아서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G20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어긋나는 이해관계, 불확실한 미래

초창기에는 합의를 높여가며 기세가 등등하던 G20 정상회의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세계 경제위기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합의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락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확장 정책을 펴다.' '국제금융기구의 추락한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고 지분을 일부 조정한다.' '미시적인 금융규제 정책을 몇 가지 추진한다.' 'G20의 위상을 높이고 앞

으로도 잘해보자.’이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재정확장의 규모, 금융규제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국가 간 의견 차이 때문에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자 시급하게 합의할 필요가 반감된 것입니다. 최근의 남유럽 위기는 유럽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미국 경제나 세계경제 측면에서는 체감 정도가 달랐습니다. 따라서 ‘유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또는 세계 경제가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는 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중적자와 달러환류 문제, 이와 결부된 중국의 환율과 수출 조정, 쇠락하는 구대륙 유럽 경제를 위협하는 갖가지 문제는 해당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합니다(질문 2 참조).

앞으로 G20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G20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커질 것입니다. 사실 ‘왜 20개국인가, G22는 안 되나, G30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G7이나 G8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판을 무마시키고 G20을 영향력있는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질문 8 참고).

G20 경찰 국가

▼ 캐나다 정부는 G20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를 비판하는 포스터. “G20, 2010년 캐나다는 경찰국가다!”



경제위기와 G20

4. G20의 경제위기 원인 진단은 타당한가요?

정책의 문제?

G20의 경제위기 원인 진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G20은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적절한 규제와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성장과 자본이동의 증가로 복잡한 금융상품이 발달하고 과도한 차입이 발생했지만, 그에 걸맞은 금융규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맞춰 각국 간의 정책 협조가 필요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즉 ‘정책조정 실패’를 경제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를 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번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1980년대 이후를 신자유주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바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한정한 이윤 추구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위한 과도한 자본 축적의 결과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본을 많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증권거래소

- ▲ 월스트리트는 영국 런던의 시티와 함께 세계금융자본의 중심지다.
- ▼ 2001년 IT 버블의 붕괴로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이 위기는 연준의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거품에 힘입어 손쉽게 해결되는 듯했으나, 더 큰 투기에 기반한 불안정한 회복이었다.



이 투자했는데 이전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20년 간의 호황 끝에 1960년대 후반부터 바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산업 부문, 즉 실물경제에서 이윤율이 하락하자 자본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금융거래와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간 금융거래와 자본이동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해외 자본에게 개방되고 외환거래도 자유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개방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에게는 IMF나 세계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개방을 강제했습니다. 한편 금융장벽뿐만 아니라 무역장벽도 해체되는 데, 이를 주도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입니다. 이렇게 금융이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유일한 이념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특징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과 결합한 금융투기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이윤율 하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융투기를 통해 돈을 버는 행위가 무한정 계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경제위기(1997-98)와 IT거품 붕괴(2001)로 금융부문의 이윤율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합니다. 주식시장과 더불어 매력적인 투기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던 부동산시장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부증권(MBS)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주택시장의 거품을 더욱 부풀립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바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발급된 주택담보부증권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것 외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금

용상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먼저 문제가 생겼고, 그러자 복잡한 금융상품의 연계망을 통해서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급속히 확산된 것입니다. 현재 엄청난 구제금융의 투입으로 위기가 약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황입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결국 현재의 위기는 이윤율의 하락을 실물경제를 통해 반등시킬 수 없게 된 자본이 금융적 축적을 지속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구조에 내재한 위기’입니다. 간단하게 ①실물경제의 이윤율 하락→②금융적 축적(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③투기거품 형성→④금융-경제위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을 파악하지 않고 ③, ④의 과정을 손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G20의 경제위기 진단입니다. 반면에 전체 과정을 파악한다면 실물경제의 이윤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혁신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의 현실을 보면 그러한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능력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국면입니다.



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20이 합의한 것은 무엇인가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G20은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G20이 지난 네 차례의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국제금융기구를 확대·강화한다는 것입니다.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G20은 WTO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도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세계은행, WTO는 전세계에 폭력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퍼뜨리고 불평등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번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주범입니다. 이러한 기구에게 면죄부를 주고 더욱 큰 역할을 맡긴다는 점에서 G20은 개혁의 의지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네 차례의 G20 정상회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첫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던 시기에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리며 모호하고 일반적인 합의만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몇 가지 금융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금융자본의 권력을 통제하거나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개혁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4월에 런던에서 두 번째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의 위기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이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가 완전히 복권되었습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지역에 자금지원을 위해 IMF와 세계은행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IMF와 G8 반대 시위

- ▲ 2007년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MF의 회의에 반대하는 시위. "우리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IMF는 손을 떼라!"
- ▼ 2008년 6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 "당장 빈곤감축에 나서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국이 자금을 출자하여 국제금융기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규제의 구체적인 개혁방안도 IMF에 맡겨졌습니다.

두 마리 토끼 쫓기: 경제 안정과 정당성 확보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위기의 확산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 아래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2010년에 경제위기가 진정되고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질문 8 참조).

한편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양질의 고용 확대와 같은 문제도 합의문에 포함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금융·경제 사안 이외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G20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자신의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선전은 이미 G8이 시도한바 있습니다. G8은 외채 탕감을 주요한 의제로 다룬다고 공언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부족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0년 초부터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큰 문제가 되어 세계경제의 안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0년 6월 토론토에서 열린 네 번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중요한 유럽의 이해관계와 재정지출 축소를 추가적인 경제위기를 염려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호하게 재정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공공부문 인력감축, 복지 재정지출 축소와 같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론토 회의는 진전된 합의가 거의 없어서 G20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 점이 특징입니다.

6. 경제위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지 않은 불안요소

경제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돈을 지출하는 구제금융이나 경기부양 정책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미국은 2008년 10월,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구제계획을 세워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2008년 10월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은 시티그룹과 AIG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정책금리를 0%로 낮추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수량완화정책'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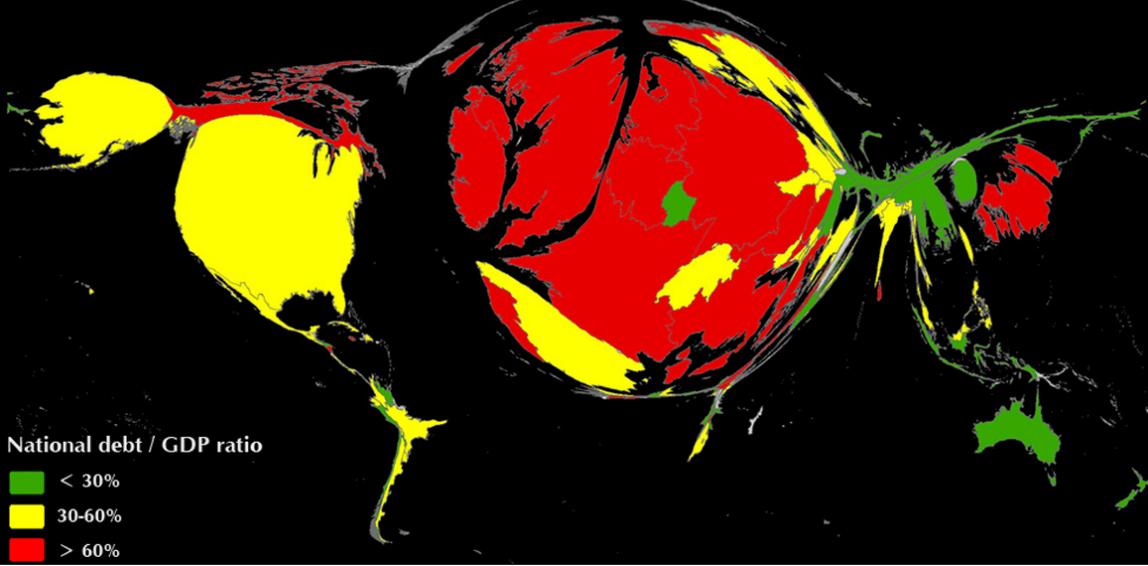
수량완화정책

전형적 수량완화정책: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것.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거품의 위험이 있음.

비전형적 수량완화정책: 2007-2009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실시한 정책. 연준은 국채 대신에 민간의 부실금융자산을 매입함. 즉, 이번 위기에서 연준은 '정부의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은행,' '기업·소비자의 은행' 역할을 담당. 따라서 연준이 구매한 부실금융자산, 즉 가치가 폭락한 주택담보부증권이 다시 정상적 수준의 가치를 회복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물론 연준조차 파산할 위험이 있음. 나아가 국가의 재정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음.

Capitalism in crisis: Global debt levels compared

Country sizes proportional to each country's total external debt



National debt / GDP ratio

- Green: < 30%
- Yellow: 30-60%
- Red: > 60%

유럽의 재정위기

- ▲ 2010년 국가채무 비중을 반영하여 그린 세계지도. 유럽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가 60%를 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 ▼ 그리스를 강타한 재정위기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같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귀결되고 있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뒤로 "IMF는 꺼져라"는 구호가 선명하다.



하지만 지금도 투기거품이 다 꺼졌는지,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이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 특히 유로존의 개도국들은 과도한 재정지출과 무역적자가 겹치면서 계속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10년 2월부터 부각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3월에 IMF가 구제금융에 참여하기로 결정되면서 얼마간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국민소득을 초과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국민소득 정도는 아니라도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재정위기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투기로?

한편 현재의 경기회복은 많은 부분 새로운 금융투기와 회계조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 미국의 이중적자 축소, 달러화의 가치 문제 등 중요한 난제가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적 축적을 끝내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이윤율이 반등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할 대안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불황을 극복하고 1960년대까지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케인즈주의에 기초해서 금융자본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이윤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변화가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본주의 경제를 혁신할 만한 새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자본은 다시 한번 새로운 거품에 의존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를 통한 일시적 회복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 1932년 뉴욕, 무료 식사 배급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대공황 당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끔찍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1930년대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성장기에 속해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인 사실이 분명해졌다.



G20과 우리의 삶

7. G20이 합의한 금융개혁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인가요?

범죄자에게 다시 한번 권력을

지난 네 차례 회의에서 G20은 국제금융기구를 확대·강화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질서를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각각 5%, 3% 이상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금융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 위임하고 또 이들의 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제금융기구의 권한을 확장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IMF와 세계은행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던 세계사회운동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는 경제규모와 출자액에 따라서 지분과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주식회사의 운영원리와 같고,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IMF의 총재는 유럽이, 세계은행의 총재는 미국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은 신자유주의 교리로 무장한 경제학자들이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기구를 더 강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IMF의 권력 강화는 신자유주의를 추진해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5번 질문 참고). 지분 이전의 목적은 중국 및 아



토빈세와 금융거래세

- ▲ 2008년 유럽사회포럼 참가자들이 “금융투기 시장을 폐쇄하라!”고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 아탁(금융과세연합)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결성된 아탁은 토빈세를 도입하여 금융거래를 억제하자고 주장했다.
- ▼ 로빈후드로 분장한 한 시위자가 영국 국회 앞에서 로빈후드세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로빈후드세) 도입 운동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G20은 금융거래세보다 훨씬 미약한 은행세조차도 합의하지 못했다.



시아의 영향력 확대라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 뿐입니다. 또한 G20은 IMF에게 구체적인 금융규제의 방안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금융통제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

일부 연구소나 운동단체는 G20이라는 틀에 효과적으로 개입한다는 목적에서, G20의 금융개혁 정책을 좀 더 급진화하거나 금융거래세와 같은 한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이슈파이팅 및 로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금융정책 개혁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금융자본의 권력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각국의 입장이 다르고 금융자본의 권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과정에서 정책왜곡이 발생합니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반성에 근거를 둔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 없이는 하나의 정책도 온전히 시행할 수 없습니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운동은 스스로의 목표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대중운동의 구성으로 사회변화를 꾀했던 대안 세계화운동의 구상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융통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그 자체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쟁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대안세계를 향한 운동의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인 금융통제의 요구를 대안세계화 운동의 맥락 하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8. G20의 글로벌 협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최근 경기가 회복되었다지만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이후 극심한 노동 불안정, 소득 불평등을 겪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서울 중산층 세 가구 당 하나의 소득이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최부유국인 미국에서조차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많은 중산층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협력을 추구한다는 G20이 과연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G20에서 고용, 최빈국 지원,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등은 어디까지나 부차적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경제위기가 조금 진정되면서 관련 의제가 조금씩 다뤄지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G20 배제 국가들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위한 국제협력?

G20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IMF, 세계은행은 "협력체계에 기초한 정책공조는 수천만 개 일자리 창출, 빈곤 타파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호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국제공조'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 결국 중요한 것은 고용 없는 성장, 노동의 희생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세계화'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임금, 무규제의 투자처를 쫓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수십 년간 증대하고 1980년대 이후 금융적 수익만을 얻기 위한 금융자본의 단기적 이동이 급증한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G20의 상체

- ▲ 이명박 정부는 G20을 위해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 ▼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진진적인 합의를 하라는 시위. 그러나 G20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조차 하지 않았다.



유지하기 위해 G7 류의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의 통화·환율·무역체계를 유지하고 경제적·군사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초국적기업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G20도 이와 다르지 않는데 G20이 표방하는 ‘협력체계’의 본질은 일본, 중국, 한국 등을 포섭해 세계화의 유지에서 문제가 되는 ‘글로벌 불균형’을 다자간 협력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즉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란 미국의 이중적자와 달러환류를 ‘지속가능하도록’ 전 세계가 ‘협력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 개발, 빈곤은 그저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해결사를 자임하는 G20은 현 문제를 야기한 ‘자본의 세계화’, ‘금융의 세계화’를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G20이 정상회의로 격상된 계기였던 금융위기도 결국 금융세계화의 결과였지만, 저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도국, 최빈국 경제를 파괴했던 IMF에게 핵심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균형성장 체제’는 결국 신자유주의를 지속하자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국 무역적자 등의 일부 부작용을 국제적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발전 담론은 한 마디로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반대 시위대를 막기 위해 쳐진 철조망



9. G20이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데 실제로 그러할까요?

빛 좋은 개살구

작년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성명서에서 양질의 노동 지원, 고용 유지, 일자리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기회복 계획 이행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으며 또 미국의 제안으로 G20 노동 장관회의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G20 노동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1)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가속화 2)사회적 보호 시스템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증진 3)고용과 빈곤 완화를 국가와 글로벌 경제전략의 중심으로 설정 4)일자리 질의 향상 5)미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노동력의 준비 등에 대한 권고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이것들은 여전히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의 불분명한 책임성,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부재로 인해 ‘말의 성찬’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G20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 노동권, 사회보장은 국제노동계의 개입으로 립서비스 수준에서 일정하게 언급될 뿐 건전재정, 물가안정 등에 비해 부차적 목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즉 다분히 정치적 선언에 가까우며 각국의 집행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라는) 현재의 도전 때문에 국제노동기준이 무시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피츠버그 합의문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는 위기 극복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말이 허언임은 이번 그리스 사태 때도 밝혀졌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EU와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역사상 가장 심각한 내용의 긴축조치(임금삭감, 세금인상,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금지 및 민간부문의 노동유연화 등)를 채택

했습니다. 그 주역들은 지난 6월 4-5일 부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선언문에서 자신들의 ‘단호한 조치’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진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자

이번 G20은 고용 없는 성장, 불안정노동을 강요하고 금융적 투기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의 희생으로 보전하려는 자본과 정권에 대항하는 국제노동운동의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적나라한 노동착취, 탄압의 장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위주 성장정책을 축으로 단시간근로, 파견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타임오프 제도, 단체협약 해지, 노조설립신고제도 악용으로 최소한의 목소리마저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지 않는 한 G20에서 운운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털끝만큼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G20 의장국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국의 현실을 폭로하면서 노동권의 국제적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누구를 위한 G20인가?

▲ 2008년 11월 워싱턴 G20 회의에 항의하는 시민. “은행이 아니라 민중을 구제하라!”

▼ 2010년 6월 토론토 G20 회의에 항의하는 시민. “누구를 위한 G20인가?”



10. G20이 빈곤국 발전을 돕는다는 데 정말인가요?

이명박의 코리아 이니셔티브?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슈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개도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서울에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개도국, 신흥국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개발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토론토 회의에서 특별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개도국/신흥국의 개발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이 의제들을 주도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신흥시장’ 국가에서 G20이 열리는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우선 국내에서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박탈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개도국의 저성장, 열악한 노동조건을 앞장서 제기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빈곤국의 소외와 배제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G20 자체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G20에는 기존 G7/8에 속하지 않았던 많은 개도국이 참여하지만, 세계의 변명과 평화를 논하는데 있어 G20이 더욱 민주적, 개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G20은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발전국가들의 참여를 배제했고 아프리카에서는 미·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남아공만 참여할 뿐입니다.

G7·G8과 비교했을 때 G20에서는 1)미국 패권의 유지, 2)유럽의 약화, 3)아시아태평양의 비약적 증가, 4)아프리카 지역의 소외가 특징입니다. 결국 G20은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국제 공조의 장이며 핵심은 유럽보다는 동아시아

아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중적자, 수출달러환류 문제를 반드시 관리해야 하며 여기에는 중국의 협조가 관건적입니다. 따라서 최근 'G2'가 주목되는 것이며, 또 중국 외에도 미국과 유사한 관계를 가지는 한국 등이 포함되어 G20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도국의 IMF·세계은행 지분 확대 또한 미국의 영향력을 침해하지 않은 채 유럽의 지분을 중국, 한국 등에게 이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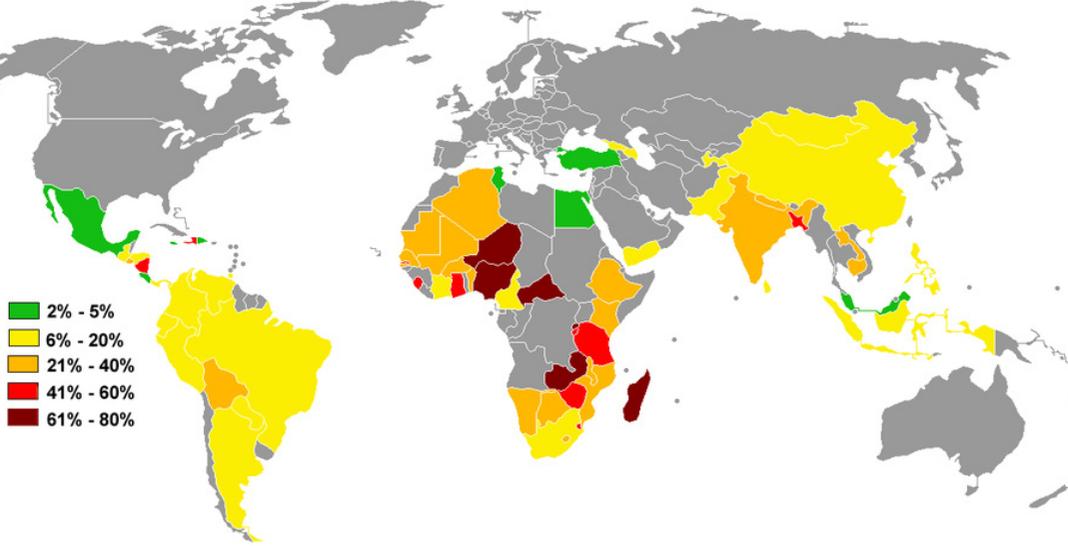
요컨대 G20에서 말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란 태생부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패권 유지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 틀에서는 최빈국의 상황이나 전세계적 빈곤, 기아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G20은 개도국·최빈국의 식량, 연료, 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2001년 UN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다음 8가지를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①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남녀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④아동사망률 감소 ⑤모성보건 증진 ⑥HIV/AIDS, 말라리아, 각종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⑧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원인 진단 없는 거지 약속

하지만 UN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러한 '최소한'조차 전혀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UN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G8이 2005년 약속했던 선진국의 원조는 현재 그들의 공언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G8과 여러 공여국들의 아프리카 원조가 2010년까지 2배 증가할 것으로 약속되었으나 2008년 부채탕감액을 제외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는 2007년 대비 10.6%만 실질 상승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또 2009년 G20은 저소득국가에 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고 최빈국들에게 2-3년간 6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금융위기의 여파로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빈곤의 세계

▼ 하루에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의 비율.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통계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국가 중에는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극단적 빈곤에 빠진 경우도 많다.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결국 새천년개발목표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없는 텅 빈 주문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세계화가 어떻게 빈곤을 조장하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모두 알다시피 초국적기업의 자유로운 이동, 즉 전세계적인 ‘착취’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더욱 끔찍한 것은 ‘착취’와 동시에 존재하는 ‘배제’의 공포입니다. 즉 초국적기업은 자유로운 국제 이동을 통해 원료, 노동력, 시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굳이 제국주의 열강 때와 같은 식민지가 필요없고, 따라서 세계화는 주변부 지역 중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는 지역은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선진국의 통치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방치되어 생태파괴로 인한 기근과 질병, 국가붕괴를 겪어야 했습니다. 1990년대 이래 계속되는 북한 핵문제도 결국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배제’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질서를 문제삼지 않고 국제평화,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시대 빈곤의 눈상



11. 이명박 정부가 G20을 통해 노리는 바는 무엇인가요?

국정 후반기 주도권

이명박 정부는 G20 개최를 ‘국가적 경사’, ‘세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날 기회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6.2 지방선거 패배, 세종시 수정안 부결, 최근 권력비리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역대 정부들은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남기는 동시에 정권에 대한 각종 비판과 저항을 무마, 억압하려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부의 각종 수사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G20 유치가 국제 정세적으로 갖는 의미를 냉철하게 따져야 합니다. 현재 G20은 미국, 또 런던 시티를 중심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영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 속에서 미·영 대 EU, 중국 대 일본 등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한국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영국은 미국 못지않게 한국의 2010년 유치를 도왔고 그 과정에서 영국 총리가 직접 나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충실한 대변인

미국의 G20 구상의 핵심은 역시 달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 패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대미 수출흑자를 통해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동아

더 큰 대한민국!

2010 G20 정상회의



이명박정부 대 민중 운동

▲ G20 정상회의 유치에 대해 설명하는 이명박 대통령. '국격향상'이란 말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이주노동자를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한 미구잡이 단속을 강행하고 있다.



시아 국가들이 수출 증가를 위해 취해온 환율 개입, 무역 장벽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 둔화에 따른 각국의 반발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영국의 비호를 등에 업고 2010년 유치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한국은 중국, 인도 등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가장 말 잘 듣는 신흥국으로 인식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이 정부의 요란스러운 선전 배후에 있는 한국의 G20 유치의 비밀입니다. G20 참가규모를 두고 유럽과 미국이 싸우는 와중에 미국편의 선봉에 설 신흥국으로서 한국이 지명된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격의 향상’류의 수사에 맞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 및 한미동맹 비판의 관점에서 G20 투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하는 대로 G20과 이후 일본에서 열리는 APEC, 또 최근 다시 국회 비준이 논의되는 한미 FTA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G20을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

현재 G20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의 사회운동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G20이라는 ‘한정기간’을 빌미로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할 수 있다는 위헌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른바 ‘경호안전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며 심지어 군의 지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은 자체 예산 120억여 원으로 올해 1월 G20 정상회의 기획팀을 꾸리고 ‘특정 시위단체의 폭력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3월 FBI 국장을 만나 ‘대테러 정보 공

유' 등 G20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양국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정상회의의 경호에서 강력 연쇄범죄 수사 기법까지 적극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G20를 빌미삼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위헌적 단속 또한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데서 노점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숙인을 거리에서 치위야할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대규모 국제회의나 행사 때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강조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행사라는 빌미로 생존권과 시민권의 박탈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발표하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G20 투쟁은 한국에서 민중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군대의 동원을 다시 보게 되거나?

▼ 2006년 5월 평택 대추리에 주둔하여 몽둥이를 들고 시위대를 막고 있는 군대.



12. G20과 APEC, FTA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G20은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틀이며 그 구상의 핵심에 동아시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20은 (G20 정상회의의 다음 날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 최근 다시 추진되는 한미 FTA와 결코 무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수단들은 똑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PEC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역할을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이미 세계 산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외환을 달러 환류의 형태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의 비중이 줄고 미국에 우호적인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대거 포함된 G20이 G7/G8을 견제하고, 미중전략경제대화(G2)를 통해 미중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동아시아 경제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율조정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려 합니다. 둘째, 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약속받아 그간의 수출달러환류 구조를 안정화하려 합니다. 셋째, 추가적인 무역개방과 투자 자유의 보장을 통해 미국의 국제수지를 조정하고 초국적기업의 이해를 관철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20 투쟁과 APEC 투쟁은 미국과 자본에 맞서 동아시아의



2005년 APEC 반대 투쟁

- ▲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반대 투쟁. 집회를 마치고 해운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APEC 반대한다!”는 APEC 반대 투쟁의 공식 슬로건이었다.
- ▼ ‘명박 산성’으로 유명한 컨테이너 박스는 아펙 정상회의의 때 먼저 사용되었다. 해운대로 가는 수영교를 가로막고 있다.



미래를 지키기 위한 사활을 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 비준 시도

특히 우리는 이와 함께 한미 FTA라는 정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방한 때 양국 FTA 추가협의를 마무리, 수개월 내 비준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G20 투쟁과 한미FTA 투쟁이 더욱 긴밀히 맞물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한미 FTA,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저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비록 최근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만 불거지고 있으나, 자유무역에 대한 투쟁은 자동차, 쇠고기 등 특정 상품의 시장개방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만 홀로 부각될 경우 자칫하면 우리의 투쟁이 국제 무역 그 자체를 거부하는 폐쇄적 요구라고 잘못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FTA에 저항하는 근본 이유는, 저들의 자유무역에서 보장하는 핵심 자유가 자본의 무한정한 이윤 추구, 노동착취를 보장하는 '투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초국적자본의 '투자의 자유'를 조약을 통해 '준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입니다. APEC에서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는 이를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강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둘러싼 힘겨루기 수준을 넘어, 현재의 FTA가 통과된다면 M&A 등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가능성조차 원천봉쇄될 것입니다. 쌍용차 사례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투기자본의 착취적 행태가 반복될 것이며 한국 경제, 동아시아 경제의 대미종속/대외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입니다.

결국 지난 한미 FTA 투쟁은 '국익'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미국으로부터 실리적 이익을 최대한 따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한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반을 금융세계화 질서에 편입시키고자 했던 미국의 구상에 정면

으로 맞선 세계적 차원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투쟁은 곧 G20, APEC에 대한 투쟁과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G20, APEC, FTA의 본질을 폭로해야 합니다.

2006년 한미 FTA 반대 투쟁

▼ 2006년 7월 12일 한미 FTA 반대 2차 범국민대회. 비가 내리는 가운데 5만여 명이 시청앞 광장에 모여 한미 FTA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FTA 저지하자!”는 민주노총의 현수막이 선명하게 보인다.



G20과 우리의 대안

13. G20 투쟁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강력한 탄압

2010년 6월 25-27일 캐나다 헨츠빌과 토론토에서 G8과 G20이 개최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행사 비용으로 12억 달러(약 1조 4398억 원)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그 중 90%는 경호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회의장 주변 3.5km를 3m 높이의 콘크리트와 철제담장으로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사회운동단체들, 예를 들어 캐나다노동연합, 캐나다공무원노조, 캐나다온타리오학생연합, 캐나다평화동맹, 그린피스, 성적소수자연합, 불법체류자인권연합은 <토론토 공동체 행동 네트워크>를 결성해 대규모 토론회와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정의, 이주노동자 정의, 전쟁과 점령의 종식, 기후·환경 정의, 원주민의 주권과 자결권, 동성애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저항행동의 날을 조직했고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대규모 행진과 시위를 펼쳤습니다.

<토론토 네트워크>는 세계의 가장 부유한 20개국의 지도자와 은행가가 모여 하는 일이란 민중과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착취일 뿐이며 식민화, 전쟁, 배제를 증대하는 자본주의 체계를 보장할 따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토론토 네트워크>는 기업과 엘리트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계에 맞서 정의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민중운동이 집결하여 민중의 힘과 전망을 보여주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경찰 2만 명을 동원하며 최루탄과 고무총을 난사하고 토론토 대학에 진입하면서까지 시위대를 연행해 900명을



2010년 6월 캐나다, G20 반대 투쟁

▲ G8과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행진.

▼ 대치 중인 시위대와 경찰. 이날 수백 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체포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2009년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앞서 영국노동조합(TUC)과 사회운동 단체들은 <인간이 우선이다>라는 연합조직을 결성하여 G20 규탄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내린 결정이 영국과 세계의 가난한 자들과 환경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괜찮은 일자리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서비스,’ ‘빈곤과 불평등의 종식,’ ‘녹색경제의 건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간이 우선이다>는 2009년 3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3-4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경제기관들, 즉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중앙은행, G8과 G20의 비민주성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계 경제기관의 신념이었던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자유시장’이 결국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곧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은행가들은 정부 지원으로 그 이전과 다름없이 잘 살 수 있느냐”며 각국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을 규탄했습니다. 같은 날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빈에서도 시위가 조직되었고 “우리에게 당신들의 경제위기 비용을 전가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사회운동은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전국적 시위를 조직했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 캐나다 <토론토 공동체 행동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g20.torontomobilize.org/>

* 영국 <인간이 우선이다> 홈페이지 <http://www.putpeoplefirst.org.uk/>

경찰 폭력

▼ 비무장 시위대를 군화발로 짓밟는 캐나다 경찰. 국제회의를 빌미로 집회시위를 가로막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반복해서 자행되는 탄압과 폭력이 새로운 기준으로 관례화되면서, 이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 폭력'이 되고 있다.



14.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G20 정상회의는 2007-09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위기에 직면한 세계경제에 처방전을 제시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경기부양책을, 때로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축소를 거시경제 운영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금융규제와 국제금융제도의 개혁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경제운영 지침이나 제도개혁안에는 그들만의 분명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입니다.

1980-90년대 각종 금융개혁법안이 도입되면서 금융기관에 부과된 제약이 제거되자 금융기관은 앞다투어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았고, 스스로 투자에 뛰어들어 거액의 단기자금 차입도 불사하며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에 베팅했습니다. 미국 거대 투자은행의 직원들은 “1-2년간 고위험에 베팅해 큰 수익을 얻으면 평생 먹고 살만큼의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08년에 결국 구제금융을 요청하거나 파산보호신청을 하게 된 투자은행의 경영자들은 거품 시절에 수천만, 수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대책은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기금을 조성해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에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금융거품의 수혜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지만, 금융 거품이 붕괴하는 순간 막대한 희생비용은 결국 다수의 민중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THE LONDON SUMMIT 2009

STABILITY | GROWTH | JOBS



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과 경찰

▲ 엄숙해 보이는 배경에는 “안정, 성장, 일자리”라는 문구가 써있다. G20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 G20 반대 시위대를 공격하는 영국 경찰.



민중의 고통 강요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 제공으로 발밑의 불을 끄면서 G20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세계경제의 회생을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제공하여 자국 경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정부는 국가 간 정책공조를 통해 세계 동시 경기부양을 주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경기부양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실의 늪에 빠진 금융기관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기업이 자금압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만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 정부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부채가 누적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정부는 다시금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축소를 내걸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인원축소와 임금삭감), 공공서비스 지출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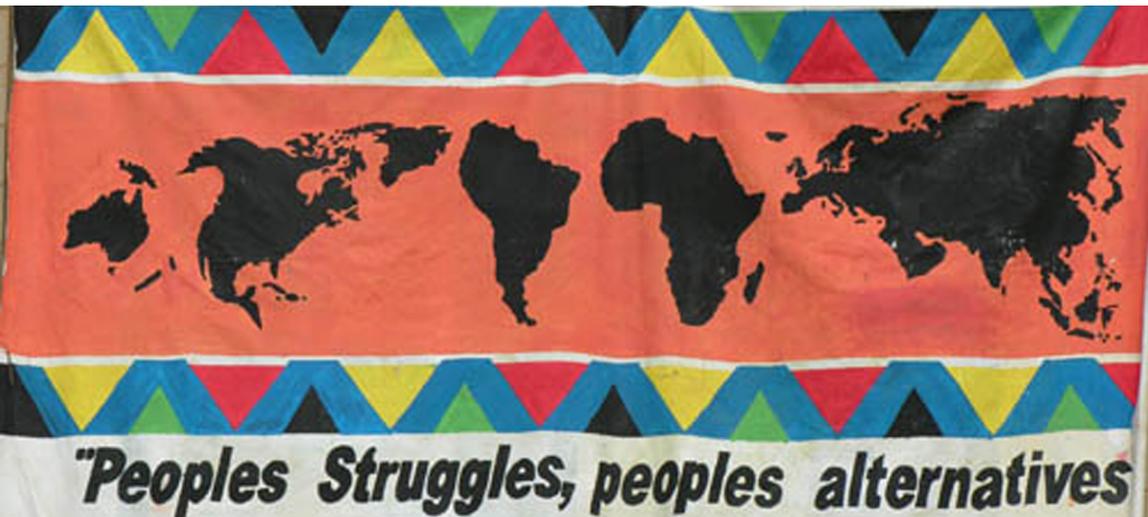
결국 정부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민중의 혈세를 담보로 막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한 후, 재정위기 가능성이 부상하자 공공지출 축소란 명분으로 다시금 민중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 사태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화 사회화’,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위기 회생비용의 민중전가’라는 정부와 자본의 근본 원칙이 유지되는 한 그들의 위기대책이 어떤 모습을 띠든 간에 민중은 일방적 고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그들의 숨겨진 진실, 곧 손실의 민중전가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는 세계 사회운동의 구호는 G20의 계급적 본질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에 미래가 달려 있다

각국 정부는 사회운동의 비판에 직면하여 금융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시늉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구제금융 비용을 금융권 스스로 부담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금융권은 규제 감독 강화가 금융비용을 증대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방안이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방안으로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더 큰 위기를 결코 예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방안은 경제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잠재력을 지닌 거대 금융자본에 근본적 제약을 가하지 못하는 계급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온다면 정부와 자본은 이번 위기 이상으로 더 큰 희생을 민중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사회운동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중의 투쟁, 민중의 대안

▼ 2009년 브라질 베넵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걸린 대형 현수막.



15. 우리는 어떻게 투쟁해야 할까요?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선 투쟁

G20 정상회의는 각국의 경제위기 대책이 지닌 계급적 본질을 규탄하고 민중의 요구를 천명하는 세계적 투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경제위기 대책의 반민중성에 맞서는 투쟁의 장이자 세계 사회운동의 국제적 요구를 표출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G20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경제회생의 기본 전제로 노동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노동신축성 확대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신축화가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이명박 정부는 어느 국가보다도 앞장서서 노동유연화를 위한 최신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여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파괴한 후, 올해 하반기에는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 변형근로제를 확대하며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고 총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최신 조치가 ‘국가고용전략’이라고, 곧 고용확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운동과 모든 사회운동은 경제회생과 고용확대라는 미명으로 저임금, 불안정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도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G20 정상회의는 각국 정부가 경제위기 대책, 특히 고용대책이란 이름으로 펼치고 있는 노동유연화라는 계급적 공세에 맞서 민중이 투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천명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목소리를!

또한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전까지 한미 FTA 재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

년에 비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국제적 금융규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된다면 한국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합의에 따라 각종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입니다. 또한 한미FTA에는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한미FTA는 시대를 거스르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지도자들과 국제경제기구가 제창한 ‘무역 투자의 자유화’가 오히려 경제위기를 촉진하고 증폭시켰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는 그들이 금융규제를 논의하는 시늉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한미FTA의 사례처럼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해에 일방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폭로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사회운동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아 그들의 경제위기 대응책의 계급적, 사회적 본질을 규탄하고 사회운동의 힘을 집결시키는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2010년 11월 서울 정상회의가 우리의 분명한 요구와 전망을 제시하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천명하는 장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09년 4월 런던, G20 반대 시위

- ▲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대안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구호가 써있다. 가운데는 실업자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다.
- ▼ "자본의 위기를 위해서 우리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구호가 써있다. 우리 말로 풀면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